



독도를 지키려는 독도소식지 5호

발행처 :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k.com> (비영리 단체)
신고 번호 : 해운대. 바 00002. 2011.5.11.
발행일 : 2011년 5월 19일
제5호. 기간. 발행. 편집인 : 이상훈
사무실 :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106-22 (진성주차장 내)
사무실 : TEL. 070-7659-7118 FAX 051-522-7118
대 표 : E-mail : ds5ean@paran.com H.P.010-6804-6510

정기간행물사업자 : 발행소 : 612-816.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3동1595-29 상정주막 401호 · 구독신청 TEL. 070-7659-7118. FAX 051-522-7118

독도소식지 5호를 내면서

독도 일본에게 빼앗길 염려가 있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독도의 위험을 모르고 있다. 독도는 절반의 해양주권을 가지고 있다. 독도의 명칭은 국제사회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독도사수연합회원이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독도운동을 같이 합시다. (편집자)

독도문제 누가 책임지나?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일에 대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자결도 하고 의병들이 일어나 항거를 하며 죽어간 애국지사들에 대하여 누가 책임지나? 국보 제1호인 송례문이 모두 불에 타 무너져 내린 사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나? 문화재청장이 그만 둔다고 송례문이 그냥 복원이 되는 것인가? 우리국민의 혈세로 복원해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 질 사람이 없다. 서해안 모두가 검은 기름띠로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쩐지 기분 나쁘게 모두 귀에 익숙한 말들이다. 그들은 아마 어느 때에 가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독도 문제를 궁극적으로 책임질 확실히 명시된 주체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아직 없다. 독도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만회(挽回)할 수 없는 파국이 왔을 때 누가 이것을 직접 책임지겠는가? 독도문제 파국 당시에 대통령은 과거에 불리하게 만든 대통령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 할지 모르고 또한 독도를 일본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국민은 대통령 책임지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다고 독도가 돌아올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은 후일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가 개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나중에 잘못 되면 당시의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되고 생각하지만 전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다.

위 글은 려해연구소 김영구 소장님이 글을 축소하고 좀 고친 것입니다. 원문을 보실분은 독도는 우리 땅 협회[공식]궁금하면 물어봐 게 시판 2647번 글을 보세요.

독도 이상훈

"독도는 일본땅" 일본교과서 나온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주도해온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을 모두 일본 땅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교과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지난 31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교과서는 지도의 색깔로만 일본영토라고 표시할 뿐 '우리의 영토'라는 구체적인 기술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새역모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주도해온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단체로, 이미 중학교교과서를 제작해 검정을 신청해 놓고 있다. (하단부분 삭제함)

2011년 02월 03일 윤인수 객원기자 sun@hameconconsulting.com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에 교과서에 대한 성명서

지진피해를 당한 선량한 일본인들에게는 위로와 동정의 말씀을 독도사수연합회는 드립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것을 역사를 왜곡하며 동북아 평화를 저버리고 남의 영토를 탐내며 뺏으려는 일본의 속셈은 만천하가 통탄하며 규탄 할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의 지진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웃사촌으로서 친하게 지내기 위함인데 일본 정부는 우리의 뜻을 저버리는가? 과거사 청산하고 동북아평화를 함께 논해야 하는 이 시기에 작년에는 영토 개념을 배우는 초등학교 지리교과서에, 올해에는 역사를 배우는 중학교의 역사교과서까지 확대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교육시키는 것은 진실을 교육받아야 할 청소년들에게 조작된 허위 교과서로 교육시키는 것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꺾는 행위이다. 2차 대전의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는 것도 미안한 일인데 후손에게 거짓 교육으로 또다시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은 결코 일본에게도 유익하지 못하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나선 독도사수연합회를 비롯한 독도단체들은 앞으로 발생하는 한일 관계의 악화될 모든 상황은 모두 일본 당국의 책임임을 밝힌다.

-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후손들에게 역사 교육을 바르게 하라!
- 일본정부는 잘못된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즉각 취소하고 한 일 외교관계 악화를 예방하라!
- 일본정부는 한 일 외교관계 증진을 통하여 동북아의 평화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

2011년 3월 30일 독도사수연합회,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신용하 "외교부, 독도문제에 '무사안일'

서울YMCA 강연 "대응 안하면 점령당할 것"(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한국 외교부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일본의 도전에 우리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7일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날 서울YMCA 강당에서 열린 제1회 종로포럼에서 '동아시아 속 한국의 진로'를 주제로강연하면서 "외교부는 독도를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으므로 침묵하는 쪽이 좋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는 대응을 하려면 일이 대단히 많아진다 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상대가 도전을 해오는데 대응을 안 하면 도전하는 사람이 옳은 것으로 세상이 알게 된다"면서 "독도 문제를 일종의 외교전쟁으로 보면 상대가 공격해올 때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그냥 점령당해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험으로 볼 때 독도 문제는 외교부의 무대응 전략으로 이승만 대통령 재임 당시보다 상당히 후퇴했다"며"심지어 일본 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거 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되는 것을 보면

2005. 3. 31. 한석레 그림판



日의원도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중지해야"

民主 도이 류이치 의원
한일 기독교 의원연맹 일본 대표로 한국 방문 공동선언문에 서명 일본 집권 민주당의 도이 류이치(土肥隆一) 중의원 의원이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문서에 서명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일본 정계가 발칵 뒤집혔다. 9일 일본 언론들은 도이 의원이 지난 2월 27일 한일 기독교 의원연맹의 일본 대표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지해야 한다"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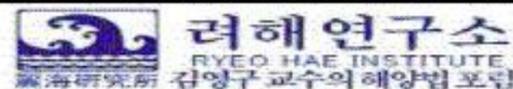
도이 의원은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가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은 변함이 없지만 한일 간에 각자 주장이 있고 한국의 주장에 납득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1939년 서울에서 태어난 도이 의원은 목사 출신으로 사회당을 거쳐 민주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수상 파벌에 속해 있는 7선의 중견 정치인이다. 도이 의원의 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간 총리는 9일 밤 기자들에게 "대단히 유감이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그런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국회의원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행위",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며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도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제 도이 의원은 (정치적)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도쿄 = 차학봉 특파원 hbcha@chosun.com 2011.03.10 03:18

일본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주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옛날주소 : 島根県隠岐郡五箇村竹島
시마네켄 오키군 고카촌 다케시마
지금주소 : 島根県隠岐郡隠岐の島町竹島
시마네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독도학회장이기도 한 신 교수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며 국민 의식화에 나서는 것은 장기적으로 독도를 빼앗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우리도 이에 대응해 장기적인 독도 수호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ulse@yna.co.kr

『1910년 韓日병합조약』 유효론과 獨島 領有權 문제2편



한국 정부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약 14년 동안이나) 아무런 전략적 숙고(熟考)나 국제법적인 정확한 분석(分析)도, 확고하고 일관된 정치적인 의지(意志)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리고 편의적으로 유지해 온,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이른 바 “조용한 외교적 대응 전략”과 일본의 현실적 대응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서 지적해 두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8년 7월 14일 중학교 새 학습 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토록 지시한 방침을 확정, 발표한 이래, 일본 정부(문부과학성)는 일본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사회과(역사 지리 공민) 교과서에 대해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술하도록 검정 지도를 함으로써 결국 모든 일본 교과서가 이렇게 수정되도록 국가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2011년 첫 학기(3월)부터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생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일제히 배우게 됐다. 전혀 흠이 없는 한국의 국토를 흠집 내서 일본이 이제 그들의 다음 젊은 세대까지 끌고 들어와 영토 분쟁을 벌이려 하고 있다. 다케시마(독도)는 명백히 일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 영토를 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될 일본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유권자가 되고 정책 결정자가 되어 정당한(?) 일본의 영토 주권을 행사하여 한국으로부터 독도를 탈환해 가겠다고 나설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여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응책은 어떤 것인가? 2010년 3월 30일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를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국경(國境; 영유권 경계선)까지 표시한 것으로 수정토록 해서 이를 검정에 통과시켰을 때도 한국 정부가 한 일은, 외교부 장관이 주한 일본 대사를 장관실로 불러들여 ‘엄중하게 유감 표명을 한 것’이 전부다. 물론 이때 일본 정부의 반응은, “교과서 문제는 민간 교과서 제작업자와 문부과학성 간의 문제이며, 다케시마(독도)가 명백히 일본 영토이므로 이러한 교육지침이나 검정 방침은 외교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2008년에 일본 정부가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토록 지시한 방침이 발표되었을 때도 한국 정부는 정확히 그 두 달 전(5월)부터 이 사태를 예견하고 “염려”만 했을 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다리다가 정작 일본 정부의 방침이 공식 발표되었을 때에 국제법상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抗辯)이나 대립된 조치를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하였다. 왜 이렇게 되었나? 독도는 아무에게 유린당해도 괜찮은 방치(放置)된 국토인가? (다음호에 계속)

독도사수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도 이상훈

http://dokdomart.com
독도마트 광고사이트

외교장관 불참에 ‘알맹이’ 빠진 독도 특위

2011년 03월 09일 (수) 05:08 10 임문식 기자 usk@news1.com

박선영 의원 “한국 영토 수호 의지 있나” 질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8일 열린 국회 독도 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독도특위)에 독도 관련 핵심부처인 외교통상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불참해 빈축을 샀다. 이들이 빠짐으로써 사실상 알맹이 없는 독도영토수호대책회의가 된 셈이다. 이날 독도영토수호대책회의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계 부처의 대처계획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대책발표는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동북아역사재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외교부와 국토부의 경우 부재 중인 장관 대신 차관이 자리에 나왔다. 외교부는 그나마 장관 부재에 대한 사유서를 써왔지만 국토부는 사유서조차 가져 오지 않았다. 독도 수호 대책에서 가장 중점 부서인 외교부와 국토부 장관이 회의에 빠진 것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몸이 아픈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차관이 대신 출석할 수도 있지만 독도 문제가 해방 이후 가장 위급한 문제인데 주무부서인 외교부, 국토부 장관의 불참한 이유를 알아봤더니 중차대한 일이 아니었다”며 “한국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대리출석한 차관들에 따르면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중국 상하이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수습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리비아 교민 철수와 관련된 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관 대신 발표와 질의답변에 나선 차관들도 의원들의 질문에 무를 추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관련부처의 독도 대책발표가 끝난 뒤 박석환 외교통상부1차관에 대한 질의에서 “차관이 발표한 것을 보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래가지고 되겠나? 왜곡된 교과서 채택률이 어느 정도인가? 차관이 그런 것도 모르고 나온다”며 질타했다. 강창일 특위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에게 몇 가지 질문은 던진 뒤 “외교부에서 너무 모르고 있어서 갑갑하다”며 이런 것이 독도 문제를 대하는 당국의 현수조를 말하는 게 아니냐고 일침을 날렸다.

합법적 독도왜곡 교육? 최장근 대구대 일본어 일본학과 교수

교육을 통해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왜곡된 독도교육으로 미래 세대에게도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심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애국교육을 강화하여 2008년 3월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7월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서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독도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 방침에 입각하여 중학교 교과서를 발행하는 각 출판사에서는 교과서 검정을 신청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즉 지리, 역사, 공민에서도 왜곡된 독도 교육을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일본서 “독도 일본 땅” 명시, 정부 단호 대처 예고

2011-08-26 08:41:11 [뉴스엔 김종호 기자]

정부가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지난 3월 24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관련 교과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조병제 대변인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조만간 발표되는데 국내에서는 독도영유권 주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대한 정부의 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우리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조병제 대변인은 “우리정부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가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정부에 으로 촉구해오고 있다”며 “지난 3월 19일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마쯔모토 일본 외무대신에게 이런 우리측 입장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있거나 역사 왜곡이 있을 경우 이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08년 7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펴냈다. 일본 민간출판사 대부분은 이를 토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적시한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검정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

김종호 phenomdark@newsen.com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관리하는 고유영토이다. 일본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교육을 통해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왜곡된 독도교육으로 미래 세대에게도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심겠다는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일본 내 역사학자를 필두로 양심적인 학자들은 일제가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던 것을 반성하여 한국 영토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용학자나 우익 성향의 정치인들에게 선동되어 영유권을 주장하는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일본의 장래를 암울하게 한다. 따라서 지금 일본 정부의 과제는 일본제국주의의 유산인 역사왜곡이나 영토침략 문제를 금세기에 종결짓는 일이다. 일본은 지금 3·11 동북부 대지진으로 2만 여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선 유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제아무리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한 일본이라고 할지라도 예정되었던 것이라고 하여 교과서 검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대참화 속의 이웃나라 일본을 돕겠다고 온 국민이 내 일처럼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이웃나라의 소중함과 고마움에 감사하고 있다. 모처럼 한일 양국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온정을 나누고 있는 마당에 기름에 불 붙듯이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이 뻔한 교과서 검정을 강행한다면 일본 외교는 대실패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일각에서는 모처럼 온정을 베풀고 있어 한-일 간의 아름다운 모습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므로 교과서가 검정되더라도 항의수위를 낮추자는 목소리도 있다. 그것은 아니다. 그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 독도 문제는 주권의 문제이다. 물론 예정하고 있는 재해지원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일부 한국 국민들이 기부를 거부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잘못 또한 일본 정부에 있다. 대지진 피해의 온정을 방패막이로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의 행위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 박물관을 국립 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 보장 하십시오.
3. 독도 관광지 개발하여 관광수입 올리고 국내,외에 관광명소 홍보 하십시오.
4. 독도 지킨 독도 의용수비대를 국가 최고 급 유공자로 모시고 독도 수비 공을 높이 기리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 협정파기, 재협상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찾아 주십시오.

※. 독도사수연합회가 서명운동 중 에 있습니다.

서명 받아 보내주십시오.

시 “독도” (전병관)

유난히 거센 파도를 지닌 독도
그 거센 파도를 지닌 것이
일본에 대한 노여움과 같으니
우리는 그런 거센 파도를 지니고
일본에 대항 하노라

우리의 땅을 또 한번 뺏긴다면
우리는 평생 굴욕적인 역사만
간직하리라
이젠 굴욕을 씻을 때 이니라
독도 도 못 지킨다면 우린 국가를
못 지킨 것 이니라

자신들의 땅조차도 못 지키는데
어찌 국가를 지키고
시민들을 지킨다 하겠느냐
독도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사명인 것 이니라

(네이버 독도사수대 회원)

日순시선독도(獨島)영해 침범

연합뉴스 | 입력 1991.01.23 09:53 (獨島-연합) 22일 하오3시40분께 일본(日本)해상보안청소속 PL103호 순시선(4백t급)이영해인 경북(慶北) 鬱陵군 鬱陵읍 도동 독도(獨島) 연안을 침범했다 20분 만에 돌아갔다. 鬱陵경찰서 독도경비대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은 독도로부터 1.5km 떨어진 해상에 나타나 우리 측이 "한국 영해이니 물러가라"는 내용의 일본어 경고방송을 계속하자 독도를 한 바퀴 돈 뒤 돌아갔다는 것. 일본순시선이 출현하자 독도경비대는 경비대원을 비상배치하고 해군과 공군에 통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끝)

영해 침범 왜 나포 안 해 (왜 그냥 보냈나?)

독도는 우리 땅 해외 홍보 김장훈도 10억 쓰는데...정부 독도 해외 홍보 예산이 1134만원

해외 홍보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독도 해외 홍보 예산이 113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의 이 같은 독도 해외 홍보 예산은 해외홍보 관련 예산 620억9500만원의 0.01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19일 국회 독도영토 수호 대책특별위원회 김을동(미래희망연대) 의원이 문화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문화홍보원이 2011년 독도 해외 홍보를 위해 쓴 예산은 민간단체 '독도레이서'의 세미나, 콘서트 지원금 1134만원이 전부였다. (중략)독도 해외 홍보에 적극적인 가수 김씨는 3월말 독도 홍보 요트대회를 추진하면서 "10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협조를 얻든 내가 비용을 충당하든 1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문화홍보원 관계자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의 각종 표기 오류 등을 바로잡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눈치나 살피니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다른 나라 지도에 표시되지. 독도 단독 표기 없다

***2016년 4월 10일, 독도가 일본에 점령 된다?**

일본, 한미 연합사 해체 뒤 기습 점거, 영유권 주장 가능성 이지스 구축함 등 인근배치 완료.....
군 독도 주둔 서둘러야
(인터넷 뉴스에 있습니다. 독도 이상훈)

예전에 구글 번역기에서 대한민국을 치면 日本(일본)이라고 번역되어 있던 것을 우리나라 네티즌의 힘으로 大韓民國으로 바로잡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일 에도 네티즌 힘이 필요해요 T T



日本国島根県隠岐の島町竹島 (韓国名・獨島だってよ) - 韓国政府によって不法占拠中です。) 国際司法裁判所に出てこい - Take-shima Island Okino-shima-Town Shimane Prefecture of Japan. - Korean name Dokdo, Korea Government illegal Occupation - Let's appear in cour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일본 고유의 영토 타케시마

서울신문 NTN
Net to News
<28일 새벽 한 누리꾼이 포털 커뮤니티에 올린 제보에 따르면, 구글어스에 한 일본 누리꾼이 독도 사진을 올리고 이를 '일본 고유의 영토 다케시마로 소개하고 있으며, '타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유했다는 일본 측 주장할 3개 국어로 버젓이 게재했다.>

독도사수연합회 후원사



나라사랑
1. 독도모형
2. 저금통기
3. 향수통기
"독도사랑저금통" 검색하시면됩니다
010-9901-2853

OORI PATENT 대표변리사 **조철현**
우리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48-23 여삼빌딩 13층
Tel.(02)556-3453 Fax.(02)557-3038
E-mail : cho@oori.co.kr

신우정공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311-4
TEL : (051) 528-8839
FAX : (051) 528-8861
H.P : 011-558-4198
E-mail : sw8818@chol.com

- 사출금형
- 특수금형
- 다이캐스팅
- 금형설계
- 건축자재
- 합마른 난간대
- 배란다
- 계단, 핸드레일 관련부품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609-809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05-22번지(진성 주차장 내)
전화: 070-7659-7118, 전송: 051-522-7118, 폰 010-6504-6510
월회비 1,000원 이상 회원모집
마음만으로는 독도를 못 지킨다
너도나도 참여하자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독도사수연합회(자본이체)

독도소식지 5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지금까지 편집이 잘 되지 못 하고 내용도 충실히 하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한번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나라가 없으면 국민은 없고 민족만 있을 뿐입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윤예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연락처 010-6504-6510
후원하실분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